

지속가능한 대학은 무엇일까?

2018.10.18(목) 18:30
청년허브 다목적홀

[국가] 사립대 중심의 대학구조

[대학] 학생회

[자본] 대학기업화

사회 김연수 (바꿈세상을바꾸는꿈)
발제 이동현 (대학연구네트워크)
김창인 (청년담론)
고준우 (대학연구네트워크)
게스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참가신청하기
<https://goo.gl/f7JYGf>



청년담론



후원



협력



〈첫 번째 지속 불가능성 요인 : 학벌주의 / 이동현〉

1. 한국의 학벌주의

2.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종전의 논의와 그에 대한 평가

한국의 학벌주의

현대 한국고등교육과 결부되어있는 주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학벌(學閥)’ 또는 ‘학벌주의(學閥主義)’가 지목된다. 학벌은 통상적으로 출신학교에 따라 형성된 파벌을 일컫는다. 학벌은 이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동고동락해온 동기들 그리고 선후배들 간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초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확장되면 특정 학교를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해지게 된다. ‘학벌주의’는 학벌을 우선시하는 사회풍토를 말한다. 진학·취업·승진에 있어서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한다거나, 또는 특정학교 출신들이 뭉쳐서 자신들끼리만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들이 그러하다. 처음에는 동기나 선후배를 후견해주는 사소한 행위에서 시작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학벌과 학벌주의의 확장을 낳는다.

학벌은 이론적으로 모든 교육단계에서 형성될 수 있지만 현대 한국에서는 주로 고등교육 단계의 학벌이 문제가 된다. 예컨대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면서부터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소속감을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다. 물론 자연과 학연이 결부된 형태로서 초등학교 동창이 중요하게 작동할 수도 있지만, 도시화와 핵가족화 과정에서 초등학교의 중요성은 낮아지는 중이라고 필자는 본다. 중학교는 입시를 1969학년도 입학생부터 점차적으로 폐지하였기 때문에 평준화되었고 따라서 같은 중학교 졸업자라도 삶의 경로는 현저히 다양하다. 따라서 학벌의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라 생각된다. 고등학교는 1974학년도 입학생부터 입시가 폐지되었으므로 중학교와 비슷한 까닭에서 학벌의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¹⁾ 반면에 대학은 시험을 쳐서 들어감으로써 구성원 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므로 삶의 궤적에 있어서 그 유사성이 높아진다.²⁾ 같은 이해관계에 묶여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1) 중학교는 오늘날까지도 극히 소수의 국제중학교를 제외하면 평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사정이 다르다. 1980년대 후반부터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가 만들어지고,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영재교육진흥법 상의 영재학교(과학영재학교·과학예술영재학교)가 신설되었으며, 2010년대 후반에 이르면 자립형·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사실상 서열이 재구축되었다. 따라서 고등학교 학벌은 이들이 한국사회의 정점에 진출할 2020년대부터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 ‘격차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학업성취 또는 지적역량의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입시의 과정에서 개인의 지적역량과 의지 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벌과 학벌주의가 확대재생산되는 기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볼 수 있다. A 대학을 나온 어떤 사람이 자신의 조직에서 인사를 결정할 수 있는 또는 제안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하자. 이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A 대학 출신들은 업무역량이 평균적으로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A 대학 출신들은 자신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자신을 도와주리라고 믿고 보험으로써 후배를 자리에 앉힌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사석에서 알려준다. 그러면 후배들은 자신을 자리에 앉혀준 선배를 위해 충성을 다하게 되고, 자신의 선배가 자신을 앉혔던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 자신의 후배들을 다시 자리에 앉히게 된다. 학벌의 연쇄가 이어지면서 그 학벌의 규모는 점차 커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내 직속 후배가 아니어도 A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언젠가 도움을 주고 받을 일이 있겠지 싶어서 밀고 당기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학벌이 커지다보면 그 안에서도 소집단으로 분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정말 믿을만한' 사람을 가리는 과정에서 순혈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학벌주의는 물론 파벌주의 일반이 만연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례가 최근에 밝혀진 일부 금융기관들의 입사 전형 성적 조작 사건이다.³⁾ 어느 사립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입시에서 대학등급제를 한 것도 학벌주의의 한 사례다.⁴⁾

학벌주의에 대한 비판은 여러 차원에서 제기된다. 첫째는 '능력'과는 무관한 '학벌'로써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됨에 따라서 사회적인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능력을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입사시험 등의 전형점수에서 소위 '명문대' 출신이 '비명문대' 출신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 흔히 근거로 제시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명문대를 들어가기 위한 입시를 뚫었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 과정에서 인정받은 것이 어떻게 평생의 유효기간을 지닐 수 있느냐는 재반론이 나온다. 그 밖에 대입 과정에서 얻은 성적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의 적절한 대리변수가 안 된다는 재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미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회경제적으로 동질적인 계층이 모여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3) 김봉구, 「“OO대라 죄송합니다” ... SKY 합격시킨 은행 채용비리에 분노」, 『한국경제』, 2018. 2. 7., (URL: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2054947g>, 2018. 10. 16. 확인)

4) 다만 이 사례는 일반 기업체에서 특정 학교 출신자를 선호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맥락에서 학벌주의를 채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명문대 학생이 공부를 더 잘 하고 따라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주고 나아가 학교의 위신을 세워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 또 이들과 자교 학부 출신들을 하나의 학벌로 묶어줌으로써 자교 학부 출신자들의 학벌 상승을 꾀할 수 있다는 믿음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진명선, 「SKY는 S등급」 ... 사립로스쿨 출신대학 카스트제」, 『한겨레』, 2016. 6. 2., (UR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6541.html, 2018. 10. 16. 확인)

둘째, 좋은 ‘학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제한되어있는데 모두가 이것을 위해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것이다. 개개의 인간에게는 학벌을 얻기 위한 각종 시험만으로는 재단할 수 없는 다양한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계발하지 못하게 되어 생기는 기회비용, 좋은 ‘학벌’을 얻는데는 최적화되지 않은 사람을 학벌 경쟁에 무리하게 몰아 넣는 과정에서 투하되는—즉 버려지는 것이 명백한—자원들, 그리고 수많은 ‘패배자’가 양산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위화까지 고려하면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셋째, 학벌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시험 준비는 물론이고 각종 이력까지 쌓아야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역량과 의지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대를 가려면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시쳇말을 통해서 엿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입시 성공의 중요한 요소임을 체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학계의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⁵⁾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종전의 논의와 그에 대한 평가

학벌주의의 병폐에 관한 설명은 이쯤에서 멈추어도 충분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곧 바로 떠오르는 질문은 “학벌주의는 어떻게 하면 타파할 수 있는가?”이다. 타파의 방안에 대해서는 199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여러 논자들이 주장한 바가 있으므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서울대학교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서울대학교 학부 출신들이 학벌주의의 정점에 있으므로 서울대학교 학부가 더 이상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 취지이다. 다만 구조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서울대학교의 교육·연구 자원 또는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학교를 완전히 해체하기보다는, 학부만 폐지하고 대학원은 존치시키거나, 순수학문을 위한 정원은 남겨두거나, 강의 자체는 개설하여 전국의 원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자는 식의 제안을 한다.

물론 서울대학교 학부를 폐지하면 서울대학교라는 학벌이 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약화되리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에 ‘버금가는’ 학벌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명문 사립대학의 학벌들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를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 등이 대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서울대학교는

5) 관련 연구로는 김세직 외, 「학생 잠재력인가? 부모 경제력인가?」, 『경제논집』 제54권 제2호, 2015; 구인회·김정은, 「대학진학에서 계층격차: 가족소득의 역할」, 『사회복지정책』 제42권 제3호, 2015.

국립대학(법인)이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하면 학교 정책에 일정부분 개입하여 학벌주의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가능성이 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운영의 자율성’ 때문에 애초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결국 국가는 고등교육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개입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한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학벌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바뀔 뿐 그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학부과정을 대학원과정으로 올린 것에 가까운 전문대학원에 있어서는 학부에 준하는 수준의 학벌이 유지될 것이다.

둘째는 중학교·고등학교처럼 대학도 완전히 평준화하거나 또는 대학이라는 형태의 고등교육기관 자체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발본색원 후 완전히 근절하는 정책이니 학벌주의를 확실하게 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학벌주의를 폐지하는 긍정적인 결과 이상의 부정적 후과가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다.

고등교육(Higher Education/Post Secondary Education)은 중등교육 이후의 단계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다양한 류의 교육을 포괄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학(University)이라는 공간은 적어도 오늘날 그것이 조직되어있는 양상을 살펴보면 지식을 생산하는 연구자 또는 이를 섬세하게 취급하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공간이다. 제아무리 인간이 평등‘해야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호나 역량에 있어서 동등하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반드시 대학에서 수학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아니된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50%가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4년제 대학의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은 채 무턱대고 평준화한다면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다른 잣대가 제시될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다시 파벌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프랑스와 같은 그랑제꼴이 생길 수도 있다.

한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을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한국의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반영된 산물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필자는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수긍하지만, 대학을 없애자는 것은 여전히 고등교육의 의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물이라고 본다.

<두 번째 지속 불가능성 요인 : 대학기업화 / 김창인>

1. 대학기업화에 대한 단상
2. 대학과 기업의 잘못된 만남
3. 대학기업화의 헬조선패치
4. 대학이 돈을 버는 방법
5. 그렇게 대학은 괴물이 되었다
6.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을 가르는 기준
7.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대학

대학기업화에 대한 단상

스무 살. 갓 입학한 대학의 첫 수업은 최악이었다. <진로탐색과 자기계발>은 신입생 모두가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했던 과목이었다. 수업은 매주 기업 CEO나 인사담당자들이 번갈아 가며 자신들의 인생관에 대해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의를 들으러 온 300여 명의 문과대 새내기들에게, 첫 수업 강사로 온 모기업 인사담당자는 당당하게 '전과'를 권유했다. 인문학은 미래가 없다며, 당장은 전공보다는 영어공부에 힘쓰고 반드시 전과에 성공해야 대기업에 원서를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술 먹자는 선배들을 멀리하라는 친절(?) 조언도 잊지 않았다. 강의를 듣던 많은 신입생들은 적지 않게 당황하거나 불쾌해했다. 나는 다음 수업부터 그 강의를 듣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대학기업화'에 대한 첫인상이었다.

내가 다녔던 중앙대는 2010년대 대학기업화의 선두에 서 있다. 2008년 두산은 '형제의 난' 이후 악화된 기업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겉으로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중앙대를 인수했다. 두산은 "중앙대라는 이름만 빼고 모두다 바꾸겠다"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이사장이었던 박용성 회장은 "솔직히 말하면 자본주의 논리가 어딜가나 통한다는 걸 느꼈다"며 기업이 말하는 개혁이 어떤 방향성인지, 그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그 이후 10년, 박용성 이사장은 재단의 폭거에 반발하는 교수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목을 쳐주겠다"는 막말 파문으로 일선에서 물러났다. 대기업 재단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던 총장 박범훈은 뇌물수수 혐의로 감옥에 다녀왔다. 그들이 개혁이라고 부르던 10년의 대학기업화 실험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그리고 그 실패의 책임은 순전히 학교와 학생들에게 전가되었다.

대학은 기업을 만나고 순수학문을 탄압했고, 학생자치를 억압했다. 이윤이 된다면 등록금으로 땅 투기를 했고, 편딩도 했다. 그 사이 학교재정은 기업의 통장으로 조금씩 옮겨

갔다. 이를 비판하는 교수들을 해임되었고, 그 빈자리는 비정규직 강사들이 채웠다. 청 소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과 노동환경을 요구하면 그들의 대자보 한 장에 100만 원씩 배상금을 청구했다. 대학은 점차 망가져 갔고,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울 것을 점점 잃어 갔다.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재단은 “믿어라, 그럼 복이 있으라”에 다름없는 절대적인 복종만을 요구했다. 그들은 복종의 대가로 세계 일류대학을 약속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했다. 학교를 운영하는 이들의 시선이 세계가 아니라, 눈앞의 이윤에 있었으니 당연한 결과다.

이러한 대학기업화의 흐름은 비단 중앙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이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사학재단들은 너나할 것 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대학을 통해 장사를 하고 있다. 지역에 분교를 설립해 땅투기에 나서거나, 학교 건물에서 학생자치기구를 내쫓고 상가를 임대해 임대료 수익을 얻거나, 정부의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 기업 입맛에 맞게 학과를 개편하기도 한다. 사립대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의 법인화 결정은 국립대 또한 대학기업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법인화는 국가에서 더 이상 재정을 책임지지 않을테니, 서울대가 독립된 법인으로서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대학기업화는 이제 한국대학 전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이 되어버렸다.

대학과 기업의 잘못된 만남

‘입시명문사립 정글고등학교’라는 N사의 웹툰이 있다. 한국 교육의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만화다. 지금도 온라인 공간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짤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중 하나는 정글고의 이사장이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아니라, 이사장인 나예요.”라는 대사인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이 장면을 보고 마냥 웃기만 했다. 그러나 풍자와 해학은 현실이었다.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 대사는 실제 많은 대학의 총장이나 이사장들의 단골 멘트였다. 그들은 본인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여겼고, 이를 당당하게 말했다. 학교를 교육기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유재산 혹은 돈을 벌어들일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대학의 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이윤창출’이라면, 학교의 내용과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 안에서 학문, 자치, 공동체 등 대학의 본질적인 가치들은 훼손되기 마련이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진리의 상아탑은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을까.

처음부터 대학이 돈과 무관했던 것은 아니다. 아니, 사실 대학이 돈과 무관한 적은 없었다. 대학도 사회의 산물이고, 그 안에서 노동하는 교수와 임직원들이 있고 수업과 자치활동을 위한 강의실과 인프라이가 있는 만큼 재정의 확보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역

사 속에서 대부분 대학은 필요 이상의 재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가가, 교회가, 교수가, 학생이 바라보는 대학의 목적이 모두 달랐지만, 적어도 이윤추구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학의 시초는 지금의 학교 형태라기보단, 일종의 교육네트워크였다. 신학이나 철학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모이고, 이들은 자신들을 가르칠 교수들을 고용했다. 그러나 외국이나 타도시에서 모인 학생들은 당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웠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학생조합을 결성했다. 이러한 학생조합은 교수 급료에 관한 사항이나 학생들이 연루된 법적인 문제, 대학의 운영 등을 다루었다. 이후 자연스럽게 교수조합 또한 결성되었다. 학생들에게 학문과 지식을 배우고 성장하려는 요구가 있었다면, 교수들은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승계할 후계가 필요했고 그래서 학생들을 함께 학문적인 성과를 성취해나갈 동료들로 대했다. 이들은 사회의 지식인집단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 교회나 국가에선 대학을 탐냈다. 성직자나 관리를 양성하는 역할을 대학이 해줄 수 있었고, 지식인집단 그 자체를 포섭할 필요도 있었다. 게다가 대학 구성원들이 특정 도시에 머물면서 생기는 경제적 이득도 상당했다. 그래서 점차 대학의 재정은 교회나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변화하게 되었다. 근대 민족국가가 출현하게 되면서 생겨난 근대 대학에선 이러한 재정지원이 더욱 당연해졌다. 학문적 발전과 성과가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사고가 가능해졌고, 대학 또한 국가가 요구하는 지식인과 교양시민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했기 때문이다. 대학에 대한 투자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투자라는 인식이 대학의 재정지원에 대한 오래된 역사인 것이다.

대학의 역사에서 대학이 기업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얼마되지 않았다. 20세기 말부터 세계를 휩쓸었던 신자유주의 광풍이 바로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 가장 먼저 대학기업화에 발을 댄 곳은 바로 미국이었다. 애초에 미국식 대학은 유럽식 대학과 모델 자체가 달랐다. 유럽식 대학이 학생조합에서 출발해 교수사회를 중심으로 한 대학으로 발전했다면, 미국식 대학은 유럽을 본따긴 했지만 후원자의 기부에 의존하는 이사회와 재단을 중심으로 한 모델이다.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도 존 하버드라는 청교도 성직자의 기부에서 출발했다. 출발 자체가 대학 구성원인 학생이나 교수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국가라는 공공의 영역도 아니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조건 없는 기부라 할지라도 후원자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미국식 대학은 후원을 매개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대학 운영개입이 쉽다는 점에서 대학기업화에 취약한 구조로 만들어졌다. 점차 국가가 재정을 책임지는 과정으로 나아간 유럽식 대학과 달리, 미국식 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과 사립재단의 후원에 재정을 의존했다. 이는 대학운영에서도 차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대표적으로 총장을 임명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미국식 대학에서 총장은 교수들의 대표가

아니라, 이사회가 지명하는 일종의 CEO가 되었다.

이러던 차에 신자유주의가 몰아쳤다. 당시 서구세계는 막대한 생산량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듯했던 자본주의 황금기가 끝나고, 저성장과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본질인데,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통한 식민지 개척이 금기시되면서 시장은 한정되고 독점기업이 그 시장을 장악하면서 경쟁 또한 불가능해졌다. 게다가 방만한 정부의 재정운영으로 인해 국가의 빚만 쌓였고, 이러한 만성적인 정부재정적자에 국민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신자유주의가 제시하는 대안은 간단명료했다. 먼저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노리는 효율성의 개념을 강조했다. 이에 기업들은 일제히 저임금과 비정규직화, 정리해고를 통해 비용을 감축했다. 자본의 이윤율이 하락하면, 그만큼 노동자들을 더 많이 착취하면 된다는 논리였다. 정부 또한 비용감축에 나섰다. 재정적자감소를 위해 공공부문들을 민영화하기 시작했다. 전기, 수도, 철도, 교육, 의료 등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재들을 시장에 맡겼다. 이는 정부의 재정적자감소 이외에도 다른 효과를 낳았는데, 바로 새로운 상품과 시장의 창출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민영화된 공공부문들을 독점하여 자신들이 해고한 노동자들에게 강매했다. 교육 또한 예외가 될 순 없었다.

대학은 그 자체로 상품이 되었다. 대학은 학위와 졸업장을 팔았고, 어느 졸업장이 더 비싼지는 대학평가순위로 결정되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감소하자 대학은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다. 학생 정원수를 늘리고 등록금도 올렸다. 수업당 교원 수를 줄이면서 비정규직 강사를 채용했고, 청소노동자들은 직고용이 아니라 하청 업체로 고용하면서 비용을 감소시켰다. 대학건물을 이용해 상가임대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을 하기도 하고, 종국에는 대학 자체를 사고 팔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강의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문제는 국가도 대학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시대가 변했을 뿐이라는 대답만 반복한다. 이렇게 대학은 기업이 되었다.

대학기업화의 헬조선 패치

대학기업화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대학이 기업처럼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을 가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학을 사유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개념, 마지막은 대학을 기업이 요구하는 자본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뚜렷하게 분리하기 어려울 만큼, 서로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다. 즉, 대학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학이 기업처럼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되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고, 혹은 대학을 자본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바

라보는 관점이 대학기업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은 오랫동안 제도권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대학기업화에 대한 사회의 정서적 반감이 더 강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사회에서 대학은 애초에 탄생부터 기득권의 사유재산으로 기능했다. 이 역시 대학기업화가 가속화될 수 있는 조건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한국대학의 역사는 겉으로는 복잡해 보이면서도 실체는 단순하다. 결국 사학족벌들이 대학을 실질적 사유재산으로 소유하는 과정이며, 이는 ‘대학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근대대학은 외국으로부터 이식되었다. 최초의 근대대학이라는 타이틀마저 안타깝게도 식민제국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의 것이었다. 경성제국대학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위한, 식민통치를 전제로 한 교육기관이었다. 이외의 외국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설립한 대학, 독립과 해방을 기치로 설립한 민족대학 등이 있지만 일제의 폭압에 쉽지 않았다. 본격적인 한국 대학사는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에 시작한다. 미군정기 남한지역 교육의 책임자는 라카드 대위였다. 그는 당연히 조선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고, 조선인 조력자들을 필요로 했다. 이런 그가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천연동 모임’이다. 천연동모임은 김성수(後고려대학교 설립자), 김활란(後이화여대 초대 총장), 백낙준(後연세대 총장, 문교부 장관), 오천석(後경희대, 상명여대, 덕성여대 이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천연동에 있는 김활란의 친구 집에서 교육문제에 대해 사적모임을 가지곤 했는데, 그런 그들이 조선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다. 천연동 모임은 미군정의 비호 아래, 우익적이고 사학 중심의 교육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라카드 대위는 당시 고등교육 재정의 90%를 서울대에, 나머지 10%의 90%를 연세대와 고려대에 지원했다. 학벌질서는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sky를 제외한 대학들은 사학재단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설립되었다.

문제는 해방 이후 대학의 설립이 우익적 고등교육 체제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넘어서, 친일부역자들에게 해방 이후에도 정당하게 자기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이승만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는 인사였다. 교육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지지세력들이 요구하는 방향성을 절대적으로 지지했다. 이승만의 중심 지지세력이었던 친일부역자들은 사학재단을 설립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친일을 통해 축적한 부를 유지하려 했다. 시작부터 한국의 대학은 사유재산으로서 기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겨난 헬조선 특유의 사학족벌들은 대대손손 대학을 친족들끼리 상속해가며 부와 명예를 누렸다. 이사회는 명절 친지모임이나 다름이 없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한 사례로 청주대 前총장 김윤배는 그 아버지가 총장이었고, 그 아들도 청

주대 학생이었다. 아마 김윤배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투쟁이 없었다면, 그 아들이 이어 총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학내구성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청주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지대 前이사장이자 前총장인 김문기는 대학 안에서 왕처럼 군림했다. 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문기 선생의 철학 ‘상지정신’>라는 교재를 통해 인성교육을 하는 이상화 교육까지 시행하기도 했다. 이 정도면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다.

교수들은 대학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러한 사학재단에 충성해야 했다. 학생들은 졸업장을 따내기 위해 막대한 등록금을 부담해야 했다. 사학족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아 교수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대학을 자신들의 왕국으로 만드는 기이한 사학구조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철저하게 대학이 사학족벌들의 사유재산으로 그 역할을 하는 동안, 한국에도 신자유주의가 들이닥쳤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석유 같은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자원은 인적자원이며, 따라서 대학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1995년 문민정부는 5.31 교육개혁을 발표했다. 내용인즉슨, 대학경쟁력을 위해 대학을 마구 늘려서 서로 경쟁하게 하면 대학경쟁력이 생기고, 국가경쟁력도 생긴다는 초보적인 발상이었다. 여기서 핵심은 대학설립준칙주의인데, 대학을 설립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누구나 쉽게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들이 서로 경쟁하면 순위를 매기고, 등수에 따라 정부가 재정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해, 90년~94년 동안 접수된 설립 신청만 무려 373건에 달한다. 당시 정부는 이를 신교육체제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대학 숫자를 늘리고, 대학별 정원도 늘려, 대학들이 서로 좋은 평가순위를 얻기 위해(다른 말로 바꾸면 돈을 벌기 위해) 경쟁하라는 뜻이다. 5.31 교육체제로 인해, 한국 고등교육에는 시장논리가 전면적으로 흡수되었다. 그들은 대학에 국제화와 실용화,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대며 이것이 새로운 교육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5.31 교육체제의 도입이 20년이 지난 지금, 대학은 기업의 포로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게 된 것이 현실이다.

대학에 시장이 개입할 여지가 생기자, 기업들은 직접 대학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드러냈다. 현대는 울산대, 대우는 아주대, 대한항공은 인하대와 항공대를 인수하는 등 기업들은 대학에 진입했다. 기업 입장에서 대학은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교수와 대학원생이라는 인프라를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하여 기업을 위한 연구를 시킬 수도 있다. 종합병원이 있는 병원이면 재정보호에 더욱 도움이 되고, 기업에 고용할 예비사원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만들 수도 있다. 2017년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 존속했던 성균관대의 휴대폰 학과는 대기업의 하청으로 대학이 운영된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균관대는 휴대폰 학과 학생들의 등록금을 면제해줬고, 석박사 과정에선 장학금을 지원해줬다. 그리고 졸업 후 이들은 대다수 삼성전자에 취직했다. 그야말로 삼성의 예비사

원을 키운다는 관점으로 대학을 운영했던 것이다.

직접 기업이 대학을 인수하여 운영하지 않더라도, 대학 스스로가 기업처럼 되고자 하는 경향도 갈수록 뚜렷해졌다. 대학은 막대한 후원금을 내는 프리미엄 고객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고려대는 기부자들을 위해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기부 금액 별로 등급을 나눈다. 100억원 이상은 크림슨 다이아몬드 클럽, 50억원 이상은 크림슨 프리미엄 클럽, 그 외에도 10억원 이상 기부에는 크림슨 플래티넘, 1억원 기부에는 크림슨 골드로 나누어 후원자와 금액을 전시한다. 자본을 향한 대학의 구애가 눈물겨울 지경이다.

대학이 돈을 버는 방법

다행히도 한국은 아직까지 교육기관을 영리화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나라다. 덕분에 대학들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건물신축사업, 임대사업 등 ‘꼼수’를 써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꼼수’들도 만만치가 않다. 악덕과 탐욕으로 푹푹 뭉친 대학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2018년 10월, 중앙대가 10년 동안 2,800억원 규모의 건물신축 공사를 두산건설에 맡아주었다는 기사가 떴다.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건물을 지어준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중앙대학교 법인의 돈을 두산건설로 옮긴 것과 다름없다. 두산건설이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산 재단은 학교 운동장을 밀어버리고 대학 단일 건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100주년 기념관을 지으면서, 막대한 건설비용을 자신들이 가져간 것이다. 사실 이 정도는 놀라운 것도 아니다.

두산이 처음 중앙대를 인수하고 처음 세운 계획은 이른바 ‘쓰리 캠퍼스’라는 멀티캠퍼스 프로젝트였다. 멀티캠퍼스는 대학을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만드는 것을 말한다. 당시 중앙대는 흑석에 본교정을 가지고 있고, 안성에 분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두산은 뜬금없이 안성교정을 팔아버리고, 하남과 검단에 캠퍼스를 2개나 새로 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많은 대학 구성원들이 당황했다. 새로 캠퍼스를 짓는 비용은 누가 댈 것이며, 안성 캠퍼스의 처분 또한 쉬울 리가 없었다. 그러나 학교본부는 막무가내였다. “이사장님의 육영의지를 믿어달라”는 강력한 호소로 학내 반발을 진압했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지방선거 이후 하남시장이 교체되자, 하남시는 중앙대의 캠퍼스 설립을 거부했다. 검단시에선 중앙대와 검단시가 힘을 모아 땅투기를 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이마저도 실패했다. 애초에 대학과 지자체가 앞장서서 땅투기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계획 자체가 문제였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현

실적 문제는 안성캠퍼스를 처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산은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된다는 전제를 미리부터 깔아놓고, 흑석과 안성을 본분교 개념이 아닌 원캠퍼스 개념으로 통합했다. 그리고 안성에 있는 학생정원을 흑석으로 끌어 올렸다. 2009년 1만2천여명이었던 흑석캠퍼스는 현재 2만여명에 달한다. 여기에 학교당국은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교원수를 감축하고 20~30명이 듣는 중소강의를 100명~200명이 듣는 대형강의로 전환했는데, 그야말로 강의실은 콩나물시루가 되었다. 그런데 정작 텅텅 비어버린 안성캠퍼스는 안성시 주민들의 반발로 처분하지도 못했다. 거기에 더해 중앙대는 안성캠퍼스 정원을 학과를 그대로 유지한 채 흑석으로 올려보낸 것이 아니라, 정원수만 맞추고 학과는 개편해버렸다. 안성에 있었던 학과들을 없애거나 정원 감축하고, 흑석 캠퍼스의 경영학과 정원에 모조리 때려 박았다. 두산은 중앙대 인수 직후 당시 300명이었던 경영대의 신입생 정원을 1200명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는데, 현재 이는 현실에서 실현 중이다. 그러던 중 흑석과 안성 두 캠퍼스를 하나로 합친 과정 자체가 뇌물이 오고 간 불법이었고, 법원은 다시 원래대로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야말로 개판이다. 두산의 중앙대 멀티캠퍼스 계획은 실패했지만, 만약 성공했더라도 큰 문제였을 것이다. 두산건설은 2개 캠퍼스를 신설하면서 떼돈을 벌었겠지만, 그만큼 중앙대학교는 빚더미에 쌓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멀티캠퍼스는 중앙대만의 이슈는 아니다. 이름 꽤나 있다는 서울의 명문사립대들은 타 지역에 멀티캠퍼스 사업을 하고 있다. 연세대 또한 송도에 캠퍼스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고, 고려대 또한 세종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단순하게 보면 캠퍼스를 추가 신설하면 정원이 늘어나고 그만큼 등록금으로 인한 수입도 늘어난다. 거기다가 대학이 지역상권을 살린다는 명분 아래, 각종 투기자본과 지자체의 지원을 얻을 수도 있다. 캠퍼스 내부의 상가임대료로 인한 수익은 덤이다. 그러나 이러한 멀티캠퍼스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만 할 수 있는 졸업장 장사다.

학벌서열에서 뒤쳐진 대학들은 명문대와 달리 선택지가 별로 없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더 많이 걷거나, 자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에게 상가임대료를 받거나, 꾸준히 재단적립금을 모아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등 별의별 방법을 다 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 기준 교비회계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사립대가 58개교나 된다. 그러나 전체 수익률은 -0.8%로 전반적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대학이 스스로 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쉬운 돈벌이를 찾다가 교비마저 까먹고 있는 것이다.

창업의 기본은 수익창출보다 비용감소라고 했던가. 대학들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대학 내 노동자들에게 쓰이는 재정을 줄이는 것이다. 안 그래도 대학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처우는 열악

하기로 소문나있다. 학생들에게는 교수라고 불리지만, 비정규직 강사들은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한 채, 연구실과 강의실에서 전임교수를 대신해 2~3배를 뛰며 저임금에 시달려야 한다. 대학들은 이런 비정규직 강사들의 수를 늘려 인건비를 줄인다. 요즘에는 대학별로 전임교수가 퇴임하고 새로운 교원을 뽑을 때 70%는 비정규직 교원으로 대체한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청소노동자로 시선을 옮겨보면 더 기가 막힌다. 그동안 대다수의 대학에서 청소노동자들은 유령처럼 지내왔다.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청소를 마치기 위해, 새벽부터 일하지만 이에 맞는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했고, 쉬는 시간이나 휴식공간도 보장받지 못했다. 그들은 대학 내에서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 존재를 철저히 부정당해왔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대학에선 이러한 청소노동자들의 정년퇴직 후 그 빈자리를 아르바이트나 단기계약 노동자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정규직 노동자를 직고용하기는커녕,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알바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대-연세대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서울 사립 명문대들의 이야기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학은 최악의 일터가 되어가고 있다.

모두 학문의 전당,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자본이 대학을 침식하면서 대학은 본연의 대학다움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러한 대학기업화의 방향성을 예측해보자면 미래는 더욱 처참하다. 대학영리화가 이미 합법으로 되어 있는 미국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자. 미국은 이미 영리 대학이 200개가 넘는다. 그만큼 대학이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에 나서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 중 대학기업화의 표상이라고 불리는 가장 유명한 대학은 아폴로그룹이 소유한 피닉스 대학이다. 피닉스 대학은 말 그대로 졸업장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앞서 소개한 대학들처럼 투기나 상가임대료 같은 꼼수를 부리기보다, 순전히 졸업장 판매에만 집중한다. 정해진 학생 수가 있는데 그럼 손해가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닉스 대학의 정원에는 제약이 없다. 피닉스 대학은 온라인 대학이다. 그래서 2006년 정점을 찍었을 때 학생 수가 무려 60만 명에 달한 적도 있다. 교수들도 비정규직 강사가 95%에 달할 만큼 비용감소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한국대학들이 가고 있는 방향성이다.

몇몇 사람들은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학생'이 아니라 '고객'으로 대우받을 때, 대학이 만 들어낸 상품 가치가 더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일단 '좋은 대학'이 되기 위해선, 대학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환경에서 일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수업'이 나오고, '좋은 행정'이 만들어지며, '좋은 인프라'가 형성된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 기업화는 좋은 대학으로 가는 기본 전제 조건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대학은 괴물이 되었다

2018년 8월의 어느 날, 대학 후배에게 전화를 받았다. 고민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후배는 중앙대에서 열심히 학생회 활동을 해왔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동아리연합회, 과 학생회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면서, 대학에서 ‘대학다움’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햇수로 6년째였다.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두산이 중앙대를 인수한 이후, 학교는 빠르게 기업화되어갔다. 학교의 운영방식이 기업처럼 바뀌고, 몇몇 학과들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과되기도 했다. 학생자치는 탄압받았고, ‘대학다움’을 기치로 이에 저항하던 학생들은 퇴학, 무기정학 등 징계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후배 또한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사유는 얼토당토않은 것이었다. 2015년 후배는 동아리연합회 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였다. 당시 선관위는 후배측 선거운동원이 학내 자치언론인 ‘잠망경’의 기사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선본 자격을 박탈했다. 이는 선관위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한 부당한 일이었다고, 후배는 동아리연합회 선거 보이콧을 진행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선거 보이콧을 이유로 후배에게 징계조치를 내렸다. 명백한 학생자치 탄압이었다. 후배는 이에 불복했고, 징계가 부당하다며 중앙대에 소송을 걸었다. 자신에게 내려진 부당한 징계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에서도 2심에서도 졌다. 3심에서도 질 것이 뻔했지만 후배는 포기하지 않았다. 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징계가 합당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3심에서도 후배는 패소했다. 학교당국도 법원도 학생자치와 대학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중앙대는 이 소송비용 모두를 후배에게 청구했다. 총 930만원이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믿기지가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이 학생을 상대로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청구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법원에 확인해보니, 청구서가 우편으로 날라오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학교당국에서 집행결정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소송비를 낼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중앙대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 설마 집행결정을 할 계획이냐고 확인해보았다. 중앙대 감사팀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930만원 전액을 후배에게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중앙대 자퇴생이다. 2014년 대학기업화에 반대하며 대자보를 쓰고 중앙대를 그만두었다.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는 언제나 중앙대 학교당국과 투쟁 중이었다. 학과 구조조정, 징계조치 무효 등 몇 차례 중앙대와 소송을 진행한 적도 있었고, 그중에는 패소한 적도 있었지만 소송비 청구를 당한 일은 없었다. 그래서 왜 이번에는 집행 결정을 굳이 하는 것인지 캐물었지만, 학교측의 답변은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이제 중앙대는 학교입장에 반하는 학생들에게 징계로 탄압하는 것을 넘어, 돈으로도 탄압하기로 규

정을 바꾸었나보다. 마치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파업 이후 손배가압류를 하는 모양새처럼 말이다. 이후에 학교는 다시 한번 입장을 바꾸었는데, “김창인(필자)에게는 아직 소송비 청구를 하지 않은 것뿐”이라며, 재판이 끝난지 5년이 지난 지금 소송비 청구를 예고했다.

두산이 중앙대의 재단으로 들어오면서 학생자치를 탄압했던 에피소드를 풀어내자면, 한도 끝도 없다. 학교정책을 비판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었다.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대자보를 붙이면 교직원들에게 떼여지기가 부지기수였고, 총장을 비판하는 글을 썼던 학내교지가 대낮에 트럭으로 전량 회수되는 일도 있었다. 학생회 선거에 직접적으로 학교가 개입해 친학교 성향의 총학생회를 당선시켰다는 의혹도 빈번했다. 2015년 중앙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두 선본이 출마했는데, 당시 한 선본만 학교 측으로부터 선거사무실을 제공받았다. 상대 선본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학교측에선 더 이상 공간을 빌려줄 곳이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2016년 총학생회 선거에선 학교정책을 비판하는 성향의 선본이 도라에몽 인형탈을 선거운동에서 활용했다. 그런데 선거운동이 한참이던 어느 날, 도라에몽의 저작권을 가진 대원미디어에서 돈을 내지 않고 멋대로 도라에몽을 이용하며 고소할 수 있으니 선거운동에서 도라에몽을 쓰지 말라는 의견을 선관위측에 전달했다. 당황한 선본에서 대원미디어에 연락을 했더니, 회사에선 모르는 일이라며 학교측에 문의해보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두산 재단이 중앙대를 인수한 이후, 소위 비운동권이라고 불리는 총학생회 출신의 대표자들은 상당수가 두산에 입사하거나,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됐다. 반면 학교정책을 비판했던 학생들은 퇴학, 무기정학, 유기정학 등 징계사례를 받아야 했는데, 2009년 이후 중앙대의 징계연루자는 어림잡아도 스무 명이 넘는다. 심지어 두산에서는 그들을 사찰하기 위해 두산 사원에게 감시를 시키고 동향 보고서를 받기도 했다. 대학 그 자체가 공안정국이었던 것이다.

중앙대 사례가 조금 더 극적이긴 하지만, 대학 전반에 걸쳐 학생자치는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의 학생회는 굳이 누가 탄압하지 않더라도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각 대학 당국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참에 학생회 자체를 무력화시킬 기세 마냥 달려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학내 언론탄압이다. 일반적으로 각 대학들마다 비판적 언론의 역할을 담당했던 교지들이 있는데, 이들은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재정을 확보해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학들은 교지지원금을 등록금에서 지원하지 않고, 등록금고지서에 별도로 교지 회비를 납부하는 내역을 만들었다. 재정보호에서부터 어려움에 처한 대학언론들은 이전에 비해 서서히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학생자치 탄압에 맞서 저항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마치 민주화 시대에 독재정권에 투쟁하던 대학생들처럼 처절하기 그지없다. 2015년 동국대에선 부정과 비리에 휩싸인 대학

당국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학생들이 고공농성과 삭발, 단식까지 진행한 적 있었다. 당시 대학운동을 책임이던 스님들은 이런 학생들은 보호하긴커녕, “나랑 머리가 똑같다”며 비웃었다. 2017년 서울대에서는 시흥캠 설립을 반대하며 총장실을 점거했던 학생들 다수가 징계를 받았고, 2018년 한동대에서도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했다며 무기정학을 받은 일이 있었다. 대학들은 이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학생들을 용납하지 않기로 한 듯하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런 모습은 대학도, 기업도 아니다. 기업이라면 ‘고객-소비자’라는 학생들을 이렇게 대하진 못할 것이다. 자본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를 버리기로 선택한 대학은 괴물이 되었고 폭주하고 있다.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을 가르는 기준

부모들은 누구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이란 무엇일까? 등록금이 저렴한 대학, 강의의 질이 높은 대학, 학내 노동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대학, 돈이 많은 대학, 역사적으로 전통이 깊은 대학 등등 많은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답은 하나다. 바로 순위가 높은 대학이다. 대학기업화의 특수성은 대학 간 경쟁에서 누가 이겼는지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확히 무슨 기준인지도 알 수 없는 내용으로 평가한 순위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에 경쟁에서 승패를 소비자나 대중이 평가하는 것과 매우 대조된다. 매년 세계적으로는 QS대학평가순위가 나오고, 중앙일보에서도 대학별로 등수를 매긴다. 정부에서는 더 나아가 재정지원을 매개로 순위별로 지원금을 다르게 준다. 이러한 대학별 순위평가는 대학들에게 자유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걸모습과는 다르게, 일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게 만든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천편일률적인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교수들의 ‘논문 편수’나 ‘순수취업률’을 지표로 대학들을 줄 세우곤 한다. 이런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의 대학을 병들게 한다. 상식적으로 철학과 교수와 경영학과 교수는 논문 편수로 경쟁을 할 수가 없다. 만약 가능하다면 대학별로 매년 칸트나 헤겔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기준은 이미 제시되었고, 대학들은 이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서 교수들을 성과주의로 위협하고, 대학평가를 올릴 수 없는 교수들은 퇴출위기에 놓인다. 교수들은 강의평가를 잘 받기 위해 인기영합적인 수업을 진행해야 하고, 각종 외부행사에 참석하여 대외활동 점수도 받아야 한다. 사회에선 대학에 점수를 매기고, 대학은 교수들을 점수 매기고, 또 교수들은 학생들을 점수 매기면서 점차 잘못된 기준의 여파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간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2010년대에 진입하면서 한국 대학가는 ‘학과통폐합’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한창 학과통폐합이 절정을 찍었던 2015년에는 한해에 통폐합된 학과만 456건에 달한다. 그런데

이렇게 사라진 학과들은 절대다수가 인문, 사회, 예술 계열이다. 철학과, 국문학과, 사회학과, 회화학과, 영화학과 등이 대학에서 폐과 조치 된 것이다. 통폐합된 학과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3월에 대학에 들어와, 4월에 폐과 소식을 듣고, 1학기 내내 수업도 못 듣고 반대 투쟁을 하다가 학교 당국의 탄압에 못 이겨 절망을 느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학은 '학문공동체'인데, 학과 통폐합은 '학문'과 '공동체' 모두를 해체하는 프로젝트에 다름없다. 대학들은 학과통폐합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통섭의 정신이니 뭐니 하면서 떠들지만, 실상 그들이 학과통폐합을 진행하는 이유는 '돈'때문이다.

학과통폐합의 가장 큰 명분은 학령인구감소다. 199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숫자도 줄어들었다. 그런데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면서, 대학 정원수가 학생 숫자보다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각 대학들은 정원수도 줄여야 하고, 상당수의 대학들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그래서 정부는 '대학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책을 내놓았다. 상황이 이러하니 어느 대학이 정원을 덜 줄이거나 더 줄일지, 또 어느 대학이 문을 닫을지 정부에서 평가하고, 그 평가 점수에 따라 재정지원의 폭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대학별로 자체 정원감소를 얼마나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MB-박근혜 정권에선 취업률 등의 시장 시스템에 최적화된 지표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프라임 사업 - 코어 사업 등의 이름으로 학과 통폐합을 알아서 하면, 지원금을 주는 유인책도 사용했었다. 대학들은 학과 통폐합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에선 재정지원을 위해 정원수 감축과 학과개편을 요구하는데, 민간에선 대학별로 등수를 매길 때 교수 당 논문횟수나 취업률을 들이댄다. 대학에선 당연히 지표상 불리한 인문, 사회, 예술 계열을 통폐합하게 된다. 쉽게 말해 학문단위를 상품으로 보고, 잘 팔리는 학과는 살리고 안 팔리는 학과는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라면, 인문학이 살아남는 곳은 학벌 서열상 상위 몇몇 대학 말고는 없을 것이다. 실제 미국에선 이미 인문학이 명문사립대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 하버드, 프린스턴 등 몇몇 명문사립대를 제외한 중소규모의 대학들에선 철학과 역사를 배울 수 없다. 인문학이 명문사립대들만의 것이 된다는 건, 인문학을 사유하는 힘을 기득권만 향유하겠다는 의미다. 길게 봤을 때, 현재 진행 중인 순수학문 중심의 학과 통폐합은 매우 위험하다.

수도권과 지역대학 간의 인프라 차이 문제는 덤이다. 안 그래도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된 사립대학들의 권력 구조가 학령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8년 교육부에서 진행한 '대학역량진단평가'의 결과를 보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20개 대학 중 18개 대학이 지역대학이다. 이는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대학들이 예상대로, 가장 먼저 '문 닫을 대학'으로 선정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대학기업화에는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과 사립대들의 재정에 대한 압박, 사학재단들의 자본에 대한 요구 등 많은 요인들이 맞물려 있다. 이는 분명 잘못된 방향성이고 이를 막기 위해선, ‘대학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좋은 대학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학은 교육기관이고, 무언가를 배우는 공간이다. 이런 의미에서 ‘좋은 대학’이란 무엇인지 말하긴 어렵더라도, 지금의 대학이 ‘나쁜 대학’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배울 수 있는 학문은 점차 줄어들고, 배울만한 사람들은 퇴출되며, 배우지 말아야 할 악습만 남고 있다.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대학

한국의 대학사회를 우려하는 많은 이들은 ‘대학의 공공성 복원’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는 교육과 지식을 공공재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교육의 수혜는 단순히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개개인만 받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은 A가 그 교육으로 인해 타인을 죽이지 않는다면, 해당 교육의 수혜는 그 A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받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받은 교육으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지식은 활용되면 활용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다. 즉, 지식은 다른 재화와는 다르게, 사용해도 소진되지 않고 사용하면 할수록 확장된다. 게다가 배우는 사람이든 가르치는 사람이든 의도하지 않더라도 지식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그 와중에 대학과 무관한 사람들 또한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는 등록금을 굳이 내지 않더라도, 지식의 습득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배운 지식을 도로 뺏어내라고 할 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식은 특정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모두가 공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 모두의 지식이라면 누구나 공짜로 배울 수 있고, 누구나 그 지식을 활용하여 더 많은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다. 당연히 이런 사회라면 등록금은 무상으로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선 지식을 사유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지나치게 팽배해있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배웠으니 그 지식을 활용해서 등록금 이상을 뽑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믿음이다. 지식은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유화할 수 없으며, 혼자만 알고 사회로 내뱉지 않는 지식은 무용할 뿐이다. 한국대학이 파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신분과 지위이며, 사유화할 수 있는 것도 학벌이지 지식은 아니다. 혹자는 특허 제도도 있고, 지적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느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지식의 확장과 발전을 막기 위한 억압기제이며 ‘모든 것은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지식은 그 어떤 것에도 통

제될 수 없다.

지식이 자유롭다면, 지식을 학습하고 논의하고 생산하는 대학 또한 자유로워야 한다. 국가든, 시장이든, 자본이든, 그 어떤 권위도 거부해야 한다. 대학을 지칭하는 진리의 상아탑에서 상아탑은 코리끼가 죽고 난 뒤에 뼈만 남아 쌓여있는 모양을 뜻한다. 코끼리는 죽기 전에 인적이 없는 외떨어진 곳으로 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상아탑은 이렇듯 대학이 사회 주류나 중심으로부터 멀어진 대안 담론을 탐구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학은 이상은 변방을 지향했고, 변방은 언제나 외로운 법이다. 그러나 외로움을 버티지 못하고, 주류세계에 편입되기 위해 발버둥치면서 대학은 그 자체의 대학다움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학의 탈선은 이미 대학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가 됐다. 시장과 자본으로부터의 '대학의 독립'이 필요하다.

<세 번째 지속 불가능성 요인 : 학생자치의 몰락 / 고준우>

1. ○○대학교 총학생회 이야기
2. 학생회의 위기 : 대표성과 효용성의 상실
3. 위기의 원인 : 학생운동의 퇴조
4. 어떻게/왜 학생회를 위기에서 구할 것인가?

○○대학교 총학생회 이야기

○○대학교 총학생회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학기 등록이 끝났지만 학생회비가 충분히 납부되지 않은 까닭이다. 아마 저조한 학생회비 납부율에는 1학기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과 불만이 반영된 것 같다. 1학기 초, ○○대 총학생회는 축제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는 될 수 있으면 대학 축제에 걸맞게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축제를 구상하고자 했다. 동아리들로 구성된 무대, 학생들이 마련한 참여 행사들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고 기업 후원은 줄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해 축제 부스를 채우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기업 후원 부스를 제외하니 공간이 터무니없이 남았다. 결국 뒤늦게 울며 겨자 먹기로 기업 후원을 받았지만 축제 당일엔 여느 때보다도 텅텅 비어있는 축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학우들의 입장에서 왜 연예인 무대가 적었는지, 왜 작년처럼 푸드트럭이나 공짜 사은품을 제공하는 기업 부스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모양이다. 재미없는 축제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문제가 된 것은 축제만이 아니었다. 총학생회 깃발을 들고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것도 문제가 됐다. ○○대학교 학생들을 대표한다는 총학생회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사안에 왜 결합했느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은 총학생회를 비꼬는 글들로 도배되었다. “축제 망쳐놓을 때부터 알아봤다. 정치병 걸린 총학생회 극혐.” 총학생회 집행부원들은 이 일로 많은 상처를 받았고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말자는 의견이 많아졌다. 이 사건이 있은 후로는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과/반 학생회나 단과대 학생회에서도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있다. 학생들의 반발이 무서워서 조금이라도 논란이 될 만한 사업 자체를 피하는 분위기가 많이 퍼졌다. 학생들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업인 축제도 평가가 좋지 않았고 논란까지 있었으니 학생회비 납부율이 높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2학기에는 OO대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가 들썩이는 사회 이슈들이 터져 나왔다. 경찰이 집회를 과잉진압하다가 시위대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총학생회 내부에서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하는 대자보를 걸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하여 OO대학교 게시판 곳곳에는 총학생회 명의로 된 대자보가 올라왔다. 그러나 이것 역시 논란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대학 총학생회면 대학 안의 문제에만 신경 쓰면 되지 왜 사회문제에도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는 일각에서의 비난이 거세졌다. OO대 학생회에게는 소위 ‘운동권’ 학생회라는 딱지가 붙었고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서는 탄핵안 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총학생회는 뒤늦게 부랴부랴 자신들이 대자보를 써서 올린 이유를 해명하는 글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했다. 지성인으로서,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좌시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글이었지만 학생들로부터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래서는 당장 이번 선거가 걱정스럽다. 안 그래도 오랜 기간 총학생회장이 당선되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어온 OO대 총학생회였다. 그러다가 간신히 총학생회장에 뜻이 있는 학생이 선거에 나서면서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총학생회였다. 단독 후보로 치러진 선거는 겨우겨우 개표 가능한 투표율을 넘겼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학생들의 총학생회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심한 상황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불거진 올해에는 투표율이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OO대 총학생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는 당장 내년 초에 있을 등록금심의위원회부터 준비하는 것부터 막막하다. 각자 자기 단위 돌보기에도 바쁜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 준비를 앞장서서 책임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변변찮은 반론도 못 내놓고 사회적인 반항조차 끌어내지 못한 채 등록금은 동결되고 말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다가 사라졌다는 과/반 학생회들을 생각하며 총학생회장은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학생회의 위기 : 대표성과 효용성의 상실

사실 OO대학교 총학생회는 필자가 만들어낸 가상의 단체다. 하지만 독자들 중에는 위의 내용을 보고 “어? 이거 딱 우리 학교 이야기인데”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OO대학교 총학생회라는 단체는 완전히 가상으로 구성된 것이지만 OO대학교 총학생회가 겪은 개별 경험담들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살짝 변형하여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이다. 갈수록 떨어지는 학생회비 납부율과 학생회 선거 투표율, 학생회 사업에 대한 참여도 하락, 대학 문화 내 소비주의의 팽창,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터부시 등은 어느 특정 대학 학생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 대학 전반에 지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현상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학생회의 위기이다. 이때 위기란 국지적인 위기가 아니라 총체적인 위기다. 단순히 학생회의 어떤 부분만 교체하면 해소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 학생회를 구성하는 요소들 대부분이 더 이상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학생회의 위기를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자. 학생회를 구성하는 요소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다시 말해 학생회란 무엇인지를 묻는 것과도 같다. 학생회는 “학생이 주체가 되어 어떤 일을 의논하여 결정하고 실행하는 조직이나 모임”⁶⁾을 말한다. 이 정의로부터 우리는 학생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서 **학생 주체**이다. 학생들이 스스로를 정치적 주체로서 받아들이고 직접 정치 행위를 할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학생회는 작동한다는 뜻이다.

둘째는 **의논하고 결정하는 측면**이다. 서로 다른 학생 주체들 사이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대표할 것인가의 문제다. 만약 학생들이 공론을 구성하지 못하고 각자 자신의 의견에 따라 뿔뿔이 흩어진다면 우리는 공통된 무언가(제도, 법, 집합적 실천 등)를 결정할 수도 없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학생회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의견 가운데서도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우리 모두의 책임을 공표하는 성격이 학생회에 필수적인데, 이를 **대표성**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결정한 바를 실행하는 측면**이다. 만약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을 충실하게 구현해내야 할 필요도 있다. 단순히 결정만 되고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생회의 쓸모(유용성)에 대해서 학생들은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학생회뿐만 아니라 정치행위 전반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 ‘정치적인 것은 괜히 문제만 낳고 도움이 되는 것은 하등 없는 피곤한 일’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회는 자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 근거인 정치적 주체로서의 학생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결정된 바를 실현하고자 최대한 효과적인 수단을 찾아야 한다. 이를 학생들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 **효용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학생회의 핵심요소를 세 가지로 분석해볼 때, 현재의 위기는 대표성과 효용성의 약화가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면서 학생들의 탈정치화/탈주체화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대표성의 위기는 투표율 하락, 정치적 사안에 대한 논란, 단독 선거운동본부로 치러지는 선거 등에서 잘 드러난다. 학생회가 학생들의 공론을 잘

6)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

대변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학생들은 선거에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학생회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 역시 학생회가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이견들을 적절히 종합하고 수렴시키는데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이다.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되면서 몇몇 학생회들은 임시방편으로 지성인 담론을 동원한다. 사회적으로 엘리트에 해당하는 지성인으로서 대학생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정치적 사안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대학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이 사회적 다수가 된 상황에서 이런 지성인 담론은 효과를 보기 힘들다. 이미 효과를 잃은 지성인 담론이 공허하게 되풀이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학생회의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다른 한편으로 효용성의 위기는 사업에 대한 참여도 하락, 소비주의 문화, 학생회비 납부율 하락 등에서 잘 드러난다. 학생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으니 학생회가 무슨 사업을 하든 성공하기가 힘들다. 강연 사업을 해도 들으러 오는 학생들이 없거나 시험 기간 간식사업을 해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없다는 것이다. 학생회 사업의 효용성이 점차 떨어질수록 학생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더 세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호하게 된다. 학생회가 열심히 공들여서 학생들의 참여로 직접 무대를 구성하는 것보다 대형 행사 기획사를 끼고 연예들이 공연하는 무대를 소비하는 것이 더 즐겁다. 생활협동조합에게 학교 공간을 내주느니 차라리 그 공간을 유명 프랜차이즈에게 내주는 게 더 낫다. 이런 식의 효용 위주의 사고를 더 확장하면 학생회비도 납부할 이유가 없어진다. 학생회비를 내고 별로 즐겁지 않은 축제를 가거나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간식을 받느니 그 돈을 모아서 연예인 콘서트를 한 번 더 가고 자신이 원하는 간식을 하나 더 사먹는 게 낫기 때문이다.

문제는 두 영역의 위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표성의 위기가 나타나면 학생들의 학생회 사업에 대한 참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학생회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도 학생회 사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곧 학생회 사업의 위축을 의미하는데 사업이 위축되면 학생회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효용성은 저절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효용성이 떨어지면 학생회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진다. “학생회비는 꼬박꼬박 걷어가면서 도대체 학생회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는 불만인 셈이다. 이런 불만이 커질수록 학생회가 자신들을 정당하게 대표하는 집단이라기보다는 수취하고 군림하려 드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이 퍼져나가게 된다. 결국 대표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대표성과 효용성, 학생회를 구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서로가 서로에게 악영향을 미치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대표성과 효용성이 선순환을 이루고 있을 때에는 학생들도 정치적으로 주체화되기 쉽

다. 학생회 사업이 잘될수록 학생들이 자신도 저 사업을 기획하는데 참여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학생회 축제가 한 번 대박을 터트리고 나면 이듬해 축제기획단 지원자들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반대로 대표성과 효용성이 악순환을 이루고 있을 때에는 학생들도 탈정치적이 된다. 의견이 수용도 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사업하는 주제에 그나마도 실패한다고 생각하니 누가 학생회를 통한 정치적 행위에 가담하려고 할까.

위기의 원인 : 학생운동의 퇴조

이제 질문은 '왜'로 옮겨간다. 그렇다면 왜 학생회에 위기가 온 것일까? 지금껏 다양한 학생회 활동가들이 나름의 답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적 사회 변화와 저성장에 따른 학생들의 파편화를 이유로 제시할 수도 있다. 살기가 어렵고 고용은 창출이 되지 않으니 취업경쟁이 심화되고 학생회와 정치적 행위에 신경 쓸 겨를도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분명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현상의 핵심적인 측면을 전부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필자는 학생회 위기의 핵심적 원인을 **학생운동의 퇴조**에서 찾고자 한다. 학생운동은 학생회를 탄생시키고 성장시켜왔던 조건이자 배경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 학생회가 처음 등장했던 것은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전까지는 학도호국단이라는 명칭의 어용단체가 대학 내 학생자치기구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학도호국단은 사상통일과 애국심 고취를 명분으로 삼은 조직이었는데, 학생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반공주의를 주입하며 단체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을 막기 위한 사회적 통제정책이었는데 결국 4·19 혁명이 발발하면서 그 존재의의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960년 5월 13일에는 학생 대표들이 모여 선거로 구성되는 새로운 학생자치기구의 도입을 선포했으며 그 명칭을 '학생회'로 정하면서 한국에서 학생회가 처음으로 탄생하게 된다.⁷⁾ 학생회는 이처럼 사회와 대학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운동의 흐름에서 탄생한 조직이었으며 따라서 학생회의 성장 방향도 운동의 영향 아래에서 구체화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기층학생-과/반 학생회 및 운영위원회-단과대학 학생회 및 운영위원회-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학생총회 등으로 구성된 상향식 의사결정 모델이나 입법·사법·집행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학생회 기구에서 논의를 통해 함께 처리하는 방식 등은 학생운동과 연관된 학생회의 조직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⁸⁾

7) 김정인, 2018. 『대학과 권력』. pp.122-123.

8) 실제로 각종 학생운동 정파들은 운동 방향과 방법에 대한 서로 간의 논쟁을 거치면서 학생회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상과 역할을 구체화했다.

운동을 위한 조직으로서 형성된 학생회가 운동을 떠나 홀로 서야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름의 방식으로 구조적 개편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학생회의 위기는 바로 그런 위기이다. 87년 형식적 민주화의 달성, 9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⁹⁾ 등으로 학생운동은 점차 약화되었고 2000년대 말 보수정권을 지나면서부터는 학내에서도 학생운동 세력이 완전히 위축되면서 학생운동과 학생회의 고리는 거의 끊어지게 되었다. 문제는 학생운동과 학생회의 끊어진 고리가 세 가지 곤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첫째로 학생회에 부여된 **사명의 구체적 내용이 부재**하게 되었다. 학생운동은 대학의 민주화부터 전체 한국 사회의 변혁에 이르는 사명을 학생회 조직에 부여해왔다. 지금도 일부 학생회의 자기소개에 남아있을 ‘민족OO’니 ‘해방OO’니 하는 별칭들은 이런 사명의 표시였다.¹⁰⁾ 그러나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 즉 ‘해방’이니 ‘민족’이니 하는 말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틀로서의 이념이나 이론은 학생운동과 함께 학생회에서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었다. 사명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해를 거듭하며 달라지는 학생회 사업을 일관된 맥락 하에서 배치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틀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학생회 사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지를 따지려면 그 사업들이 지향하는 바로서의 사명과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운동이 사라지면서 기초가 매년 선출된 회장단과 함께 새롭게 도입될 수밖에 없어질 경우 학생회 사업의 비판적 계승이나 장기적 발전은 요원해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성폭력 운동이다. 과거 학내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에 학생회는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이해했으며 이에 따라 반성폭력 내부규약, 총여학생회 등의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운동이 약화되면서 그 유산들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시간이 지나 다시금 페미니즘과 반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오늘날, 학생회들은 결국 과거 학생운동 유산의 유실로 인해 다시 무(無)로부터 반성폭력 운동을 일궈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운동의 쇠퇴로 인해 과거의 한계 지점이나 배워야 할 점들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면 더 수월했을 작업들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막막함 속으로 던져지게 된 것이다.

둘째로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갈등을 표현해줄 양식이 부재**하게 되었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인간 공동체라면 어디든 그럴듯이) 학생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차이 혹은 적대가 발생

9)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96년 연세대학교 제7차 8.15 범민족대회 무력진압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가권력은 학생운동이 시대착오적 폭력투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덧씌움으로써 학생운동이 대중적 지지를 잃고 고립되도록 만들었다.

10) 이와 비슷한 사례로 학생회 표어를 들 수 있다. 한 사례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압제를 불살라라 민족고대 총학생회’라는 현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압제’가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답할 수 있는 학생회는 많지 않아 보인다.

하게 된다. 학생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에 이러한 차이/적대는 ‘정파’라는 양식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었다. 각 정파는 정세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놓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어떤 실천을 할 것인지 노선을 제출했다. 학생들은 그들 가운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파의 실천에 지지를 보낼 수 있었고 이는 학생회 선거에도 반영이 되었다. 복수의 선거운동본부가 나올 때 각 후보들은 자신의 정파에 따른 공약과 실천론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투표를 통해 정치적 차이가 대표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운동이 전반적으로 쇠퇴하면서 모든 정파들이 함께 약화되기 시작했다. 점차 정치적 차이/적대는 운동권 내부에서의 정파들의 경쟁으로 표현되지 않고 운동권 대 비운동권(혹은 반운동권)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권 대 비운동권의 적대도 문제를 드러내고 말았다. 얼마 남지 않았던 운동권들마저 학생회 집권을 하나둘씩 포기하게 된 것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신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운동권에 ‘반대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해온 비운동권 학생회에게 운동권의 부재는 곧 자기 내용의 부재를 드러내는 위기가 되고 말았다.

독재정권의 몰락과 시민사회운동의 발전 등 한국사회의 변화는 대학 내에도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적대들(ex. 보수 대 진보, 외국인 학생 대 내국인 학생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학생운동 정파의 약화는 이들 적대가 학생회 투표를 통해서 대표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렸다. 이것이 만들어낸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논란이 될 만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총학생회가 발언할 수 있는 대표성이 사라진 것이다. 정파가 사라진 총학생회 투표에서는 후보가 특정한 정치적 가치나 실천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당선될 수 없다. 학생회 대표자는 이제 ‘모든 학생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데 이때 ‘모든 학생’이란 기껏해야 대학 교육의 소비자로서의 당사자 정체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자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나 이념에 따른 정치적 실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다. 그런 정치적 실천을 하는 순간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로부터 쏟아지는 ‘불통’이라는 비난과 심할 경우 탄핵 압력까지도 감수해야 할 테니 말이다. 사실 이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학생 대중의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대변해줄 정치조직은 없고 매번 비슷비슷한 공약을 가진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하는 상황이니 학생회가 ‘불통’이라는 불만만 늘어나는 것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셋째로 무엇보다도 **학생회의 구조를 뒤에서 지탱해온 조직이 부재**하게 되었다. 학생회의 현 구조는 사실 잘 조직된 정치집단을 가정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로 가득하다. 학생회의 분절화된 위계구조를 생각해보자. 학생 대중-과/반 학생회-단과대 학생회-총학생회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는 이들 사이를 결합해주는 조직체가 없다면 지나치게 권력거리¹¹⁾를 확대하는 불필요한 구조가 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학생운동 조직

11) 권력거리란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헤이르트 호프스테더(Geert Hofstede)가 도입한 개념으

은 기층의 학생들부터 총학생회에 이르는 의사결정과 실천의 단위를 연결시켜주는 매개가 되어주었다. 같은 정파에 소속된 학생들이다보니 각 단계에서 학생회 간 협력이 보다 유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1년에 1번 치르는 학생회 선거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년은 사실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고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기에 지극히 짧은 시간적 단위다. 이제 막 집행부가 학생회 사업에 익숙해질 때 짬 학생회를 새롭게 갈아치운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1년마다 새로운 대표를 선출한다는 것은 선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ex. 선거관리위원 교육, 선거운동 비용 등)을 부담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학생회는 지금껏 이런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 역시 학생운동 조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학생운동 조직은 학생들을 학생회 간부로서 교육하고 육성해냈으며 과/반 학생회 대표부터 차근차근 경험을 쌓게 하여 최종적으로 총학생회장 선거에 도전할 때쯤에는 숙련된 간부가 되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나아가 학생운동 조직은 대표자 개인의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과거 대표자 경력이 있었던 운동 조직 내 선배들이 조언과 도움을 줌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결국 빠른 교체 주기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숙련도를 갖춘 학생 대표자가 사업을 견인하고 그에 따른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었던 것은 조직의 존재 덕택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과거의 학생운동이 학생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남겼다면 사실을 왜곡하거나 미화하기 위함이 아니다. 물론 학생운동 조직들의 비밀결사 형태는 공개적으로 드러난 견제와 비판을 피함으로써 반민주적인 정치행태(소위 '상왕 정치')를 낳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운동 정파들은 학생운동을 전체 사회변혁운동의 분파로서만 간주하고 대학이라는 공간을 그 자체로 진지한 운동의 현장으로 삼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었다. 그로 인해 학생운동은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 대중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비난을 받아야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한계와 별개로 학생운동은 학생회라는 조직이 형성·성장하는 핵심적인 모체(matrix)였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지금의 위기는 바로 그 모체의 상실이 가져다주는 위기인 것이다.

의미심장한 사례를 하나 제시하고자 한다. 고려대학교에는 2007년부터 2008년, 그리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총학생회에 집권한 '고대공감대'라는 선거운동 본부가 있었다. 이들은 소위 운동권 학생회에 반대하여 '배후세력 없는 총학생회', '일 잘하는 총학생회'가 될 것을 학생들에게 약속하고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대로 세련된 학생회 사업들로 학생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각종 복지 사업이 확대되었고 중앙일보 대학평가 거부 등의 사회적 메시지를 지닌 사업들도 활발히 전개했다. 나아가 공과대학을 조직화하여 '공대공감대'라는 이

로, 하급자를 상급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감정적 거리를 의미한다.

름을 단 학생회를 꾸준히 출범시켜 실력 있는 학생회 간부를 육성하기도 했다. 고대공감대는 운동권이 아님에도 총학생회를 잘 경영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셈이었다. 그러나 고대공감대의 최후는 그다지 밝지 못했다. 총학생회장이 후임 총학생회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대공감대의 역사는 비리로 종지부를 찍고 말았기 때문이다. 고대공감대는 운동권과 같은 '배후세력'을 배제하는 총학생회를 자임했으나 조직화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는 자신들이 또 하나의 '배후세력'이 되고 만 것이다. 고대공감대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이 이야기는 학생운동이 모체가 된 학생회의 조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어떻게/왜 학생회를 위기에서 구할 것인가?

사명의 부재, 정치적 양식의 부재, 조직의 부재. 학생운동의 퇴조와 함께 학생회에 찾아온 세 가지 부재야말로 오늘날 학생회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핵심원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생회의 위기를 극복할까? 여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명, 정치적 양식, 조직을 복원하는 방향성 하에서 제출되는 방법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대안도 잠시 위기를 우회하는 미봉책을 넘어서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출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서로 양립가능하지만 분석적으로는 구분되는) 두 가지 정도의 대안이 있다. 첫째는 **학생운동을 복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복원이란 과거의 학생운동을 답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전의 학생운동처럼 전체 사회를 변혁하는 운동의 단순한 부속물이나 분파가 아니라 자신만의 현장으로서의 대학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운동을 구성해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대학의 민주화를 새롭게 상상할 필요가 있다. 이전까지의 대학의 민주화는 대학 외부에 존재하는 강력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의 민주화는 결국 사학재단, 시장질서가 지배하는 대학 공간을 열어놓는 길로 빠지고 말았다. 대학 내 권력의 주도권이 국가에게서 재단과 기업들로 넘어가는 사이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대학 내에서 위축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는 '대학 외부의 권력과 맞서는' 민주화의 단계를 넘어서 '대학 내부의 권력을 보다 평등하게 나누는' 민주화의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학교 운영으로부터 소외된 주체들, 다시 말해 학생과 노동자(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 시간강사들 등)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학생회의 새로운 사명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명을 새롭게 수립했다면 그 사명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동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운동조직이 그와는 다른 입장을 가진 조직들과 경합하

면서 대중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치적 대표성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학생회에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를 도입하는 것이다**. 모체가 되는 학생운동이 퇴조한 상황에서 더 이상 학생회가 ‘이전과 같은 형태로’ 유지될 수 없다면 이전과는 다른 형태를 취하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감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학생들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고 학생회 간부들을 육성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을 도입하고, 회칙을 강화함(ex. 처벌규정의 세분화, 책임과 권리 조정 등)으로써 법치주의 원리를 도입하는 등의 개혁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현재의 학생회 모델을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의민주주의적 모델에 가깝게 재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변화를 수행하게 되면 최소한 정치적 갈등들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해 발생하는 대표성의 위기나 조직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효용성의 위기는 다소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가와 학생회의 서로 다른 조건(ex. 강제력의 유무)으로 인해 한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만약 그 어떤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도입하자는 말은 보다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학생회의 해소**까지도 고려를 한다는 말이다. 학생회 스스로의 시대사적 한계나 소명의 소멸을 인정하고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길일 수 있다. (이 말이 대학 내 정치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회가 아닌 다른 형태의 정치적 실천이 필요하다는 말에 가깝다.) 오히려 스스로를 생산적으로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역량의 건전한 표현방식일 수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위기 속에서 천천히 괴사하다가 사라지는 것,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서 비상대책위원회만 근근이 꾸리다가 학생총회 한 번 못 열어보고 사라지는 것은 양상한 죽음에 불과하지만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학생총회나 총투표를 통해 학생회가 해소된다면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유의미한 질문들을 산출하는 풍요로운 죽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생회 해소가 위기에 대응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결국 우리가 왜 학생회를 위기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든다. 학생회가 위기라면 그냥 사라지게 내버려두면 안 된단 말인가? 왜 학생회여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 대답은 이렇다. 오늘날 학생정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학생회는 학생정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지금 대학은 지속불가능한 조건에 처해있다.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산업구조는 변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금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대학들은 새로운 대학 모델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향을 논하는 논의의 장에 학생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 기업의 이윤에 종사하는 지식을 생산하도록 대학을 보다 더 기업화시키자는 자본권력의 주장, 국가의 통제와 지원 아래서 대학의 질적

관리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국가권력의 주장, 대학을 보다 더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사학권력의 주장만 넘쳐날 뿐 학생들이 바라는 대학이나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지식생산의 공공성을 논하는 주장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대학이 불가피한 변화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때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학생정치가 계속해서 마비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학생들만 사회변화의 부담과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학생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창안할 역량도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없다면 우리는 학생회의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학생회의 위기를 넘어서야 할 이유다.